백원국 2차관, “국민 불편 최소화, 안전운행에 만전” 강조

- 11일 철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… 안전 운행 · 충분한 사전안내 당부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한국철도공사(이하 철도공사) 노조의 파업(9.14)을 앞둔 9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(영상)를 주재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.
 - 백 차관은 “수서행 KTX 운행, 코레일-SR 통합 요구 등 정부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”이라며, “정부의 파업계획 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,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노조 파업 전날인 9월 13일부터 주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, 파업 종료시까지 철도기관사 대체인력 투입, 버스·항공 등 대체수송수단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.
 -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은 평시대비 70%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하고, 부족한 열차 공급분에 대해서는 고속·시외버스를 추가로 배차한다.
- 백 차관은 “무엇보다 안전한 열차운행이 최우선”이라며, “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”고 거듭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, “철도노조의 갑작스런 파업결정으로 인한 사전안내 부족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언론보도나 코레일톡 뿐만 아니라 개별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열차운행 중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 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23. 9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